

## 북한의 권력승계와 남북관계의 전망

정주신\* · 김학만\*\*

### 목 차

I. 서론	IV. 권력승계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
II. 북한의 권력승계요인	V. 결론
III. 북한의 권력승계과정	

### 〔 논문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김일성 시기 그 아들인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해 왔듯이 김정일 시기에 도 그 아들인 김정은에게로 권력이 승계된 데에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북한의 권력승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부자세습을 해 온 것처럼 이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 시기 또 다시 김정은으로 3대에 걸친 부자세습으로 그 아들의 권력승계가 필연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권력승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은 무엇인가 불안한 느낌을 준다.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은 물론 정치에 갓 데뷔한 아들을 권력의 최정상으로 격상시킨 것은 김정일의 병세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권력상속 의도는 그간 김일성-김정일의 북한 통치를 보장받고 안정된 체제유지를 이끌고자하는 속셈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어 : 북한, 권력승계, 부자세습, 김정일-김정은, 체제유지, 남북관계

\* 한국정치사회연구소장

\*\* 우송대학교 교수

## I. 서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이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sup>1)</sup>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력이 김정은에게 단계적으로 이동하면서 권력분점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sup>2)</sup>가 주 원인이며, 그에 따른 권력 위축, 즉 권력누수<sup>3)</sup>가 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

북한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에 일정 부분 훼손이 생기더라도 김정은 후계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내부적 사정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외에는 별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최고권력자의 건강이 완전하지 않아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후계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면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승계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두 번째 권력이양을 의미한다. 1966년 이후 44년 만인 2010년 9월 29일에 개최되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대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띠는 것은, 북한내부의 사정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가속화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하튼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을 때는 겪지 않았던 정당성 결여, 권위 부족 등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이나 후계자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권력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계자를 추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 든 것이다.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은 정치 경험이 없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통치자이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지탱하는 선에서 아무런 탈 없이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그랬듯이 북한 군부 실세들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크게 의존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권력기반 장악에 성공한다고 해도 김정은은 김정일 이후의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북한의 만성적인 민생고를 해결할 만한 경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군대조직은 고령화되고 군사시설은 노후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얼마나 궁핍

1) 북한의 권력상속은 대를 이어 충성하는 권력승계방식에 기인하지만, 그들이 체제를 고수하는 한 이 방식은 지속되리라 여겨진다. 결국 북한의 권력승계는 중국 공산당처럼 수평적 권력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주신,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정주신 편, 『현대 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24-25쪽 참조.

2)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현재는 상당히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초래할 공산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북한을 통치하게 돼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체제가 당면해 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최초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승계 이후 또 다시 김정일-김정은 부자승계로 새로운 권력을 원만히 승계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간 김일성의 후계관리는 김정일 체제로 추진되어 김일성 사후 16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오늘에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김정일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데서 이 논문의 목적은 김일성 시기 그 아들인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해 왔듯이 김정일 시기에 그 아들인 김정은에게로 권력이 승계된 데에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논문은 북한의 권력승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부자세습을 해 온 것처럼 이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 시기 또 다시 김정은으로 3대에 걸친 부자세습으로 그 아들의 권력승계가 필연적으로 이뤄진 것을 전제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물론 김일성 시기 김정일로의 후계자 선정이 1980년 10월의 당 대회에서 공식화된 것에 비해, 김정일 시기 후계자로 김정은의 선정이 결정된 것은 권력승계 이후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현상유지의 과정이 될 것인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하 김정일 체제에 와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부각되는 것은 향후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이 남북관계에 초미의 관심사라는 데서 문제를 짚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논의의 전개상, 우선 김일성 시기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을 전개하면서, 그 다음 이를 배경으로 김정일 아들인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논의를 적요하는 것이다. 이는 곧 권력승계로 볼 때 김정일과 김정은의 두 시기의 비교적 고찰이 어떻게 일치하고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 승계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 Ⅱ. 북한의 권력승계요인

북한의 권력승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체제의 성격도 그렇지만 대(代)를 이어 충성한다는 북한의 체제승계의 구도로 볼 때 더욱 그렇다. 이런 변수가 많은 북한의 승계구도를 일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체제유지를 귀속하려는 귀속요인과 체제유지를 둘러싼 갈등요인, 협력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귀속요인

첫째는 가족 권력체제의 구축에서 체제의 강고함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최고권력자인 수령의 생존 시에 후계자가 추대되어야 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승계위기를 방지하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가족 권력 체제 구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반을 이어왔다. 이번 노동당대회에서 드러났듯 김정일은 도와줄 가족 측근 세력들이 핵심 권력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권에서의 승계관리의 전례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김일성으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계자로 친자인 김정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베버는 카리스마적 지배가 자신의 항구적인 제도화를 시도할 때 직면하는 최초의 문제를 후계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혈연을 통하여 카리스마가 계승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김일성-김정일로 대를 이어 후계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카리스마의 비인격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생리학적인 혈연을 증시하게 되면서부터 어디서나 처음에는 조상의 신격화가 시작되고, 이것이 무르익으면 지배자의 조상에 대한 신격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오늘날 북한체제에서 통치 권력의 세습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과정은 카리스마의 일상화 외에 혈연 및 가족권력 체계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다.

둘째는 혁명투쟁의 정치적 권위에서 권력승계를 찾을 수 있다. 혁명투쟁경력은 정치적 권위요인의 으뜸이 된다. 김일성은 이른바 항일혁명투쟁을 절대권위의 근거로 삼았으나 혁명세대가 아닌 김정일로는 제2의 혁명, 즉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권위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의 경우는 정치투쟁의 경험에 관해서는 유추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역설하며 주체사상을 무기로 그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한 셈이었다.

셋째는 신격화 및 우상화 단계에서 권력승계를 찾을 수 있다. 신화는 원래 신과 인간사이의 긴장을 연결해 주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간자신을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sup>3)</sup> 이를테면 서사시의 전설적 영웅은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 사회적 안정화, 권력신화, 영웅신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승계체제관리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김일성 카리스마의 전이 외에도 미디어는 김정일에게 신화적 위광을 제공했다.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라면, 김정일은 '미래의 공산주의의 태양'이라고 지칭되었으며, 전자가 '장군별'일 때, 후자는 '향도의 별'이라고 함으로써 통치 권력의 승계자임을 강력히 암시했다.<sup>5)</sup> 김정일이 후계예정자로 부

3) Gilbert M. Cu Thbertson, *Political Myth and Epic* (Michigan State Univ. Press, 1975), p. 158.

4) *Ibid.*, p. 159.

5) 이우정, 『권력승계와 정당성』 (신양사, 1997), 229쪽; 이우정, “북한체제 엘리트의 이동양태 및 갈등분석” 『안보연구』 (동국대 안보연구소, 1981), 173쪽.

상되던 6차 당 대회 당시에도 미디어 수준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신중성을 보였으나, 1981년 6월부터는 '당중앙'이라는 음어적 호칭 대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이 공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로부터 각종 기념비, 출판물, 군중집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넷째는 당·군의 지지기반 확립에서 승계요인을 찾을 수 있다. 당과 군에서의 권력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견고한가의 여부는 실질적 권력기반이 어느 정도이냐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기관에서의 기반확보는 권력 장악의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미 1979년에 들어와 오극렬(만경대혁명학원 1기)의 군총참모장 기용을 전후하여 자신이 핵심세력들을 당·정·군에 대거 등용함으로써 일단 세력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는 권력자의 대를 이은 충성으로 승계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이 지명 후계자로 자신의 친자인 김정일을 선정한 후 승계체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한 것도 승계기반의 확충이었다. 김일성은 생전에 후계자가 당 조직을 바탕으로 군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정일을 당 군사위원회에 진출시킨 후 인민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고, 마침내는 국방위원장에 보임함으로써 그가 국가원수가 아닌 상태에서도 당권과 군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김일성 체제하에서 김정일이 당의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실적으로는 권력 승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여섯째로는 후견인그룹 기반에 기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군대의 지지 없이는 권력 장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악에 혹여 성공한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권력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후계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세력기반이다. 일반적으로 승계에 유리한 조건은 권력핵심에의 접근인데, 이를 후계권력이 적극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승계의 중심 고리에 가장 근접되고 유리한 직위는 서기직을 겸한 정치국위원으로서의 당력을 가진 당기구의 수뇌라 할 수 있다.<sup>6)</sup> 보통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기반은 물리적 힘을 관장하는 군부와 공안기구, 당 관료기구, 국가기관 등이다. 권력 장악에서 군부와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북한정치 상층부를 차지해 온 주요인물들이 당·군을 조직하고 권력 장악과 유지에 능한 원로혁명세대라는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 2. 갈등요인

### 1) 대내적 갈등요인

첫째는 북한의 경제난에서 승계의 갈등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후

6) Harold D. Lasswell (eds.), *World Revolutionary Elites*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65), pp. 130-131.

〈동북아연구〉

가뭄과 폭우 등 천재지변과 폐쇄체제에 기인된 식량조절 실패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최악의 상태로 빠진 경제난을 극복하는 일은 김정일 체제의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민심이 극히 흉흉한 만큼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북한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째는 최고권력자의 건강문제 발생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후계구도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남은 수명은 3~5년에 불과하다.

셋째는 젊은 후계자로서의 유약함이 승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김정일의 경우 1961년 노동당에 입당한 이래 27세 때(1969년)에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후계의 길에 들어서게 된 만큼, 당시 유약한 후계자로 각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든든한 후원 아래 20년에 걸쳐 후계 구도를 완성하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입증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려면 후계 구축에서 발생할 권력 충돌을 조정해 줄 아버지와 후계 교육,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키울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넷째는 폐쇄적인 국가의 통치적 질서에서 승계의 갈등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권력의 이양과정은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베일에 싸여 있다. 그 때문에 승계체계를 최고권력자의 '일방적인 낙점'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부자간 권력세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왕조 사회에서나 가능한 권력의 세습' 정도로 폄하되는 것이다.

## 2) 대외적 갈등요인

첫째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서 승계의 갈등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고립돼 있고 중앙집권적이며 빈곤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지난 수십년동안 빈곤과 기아에 허덕여 온 북한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북한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경제 재건에 따른 장기적인 문제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둘째는 북미관계 및 6자회담에 따른 핵문제에서 갈등요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권력승계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및 6자회담 내에서의 (북한과의) 관계 재개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핵을 계속 고집할 경우 미국은 물론 주변 당사국들은 대북 제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천안함 사태 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 등은 상당기간 미해결 상태에 묶여 있다. 그 결과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돌발변수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6자 회담의 진전도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한다

고 밝혔지만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영원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존 체제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 3. 협력요인

첫째는 북·중관계의 지속화에서 권력승계의 협력요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서는 내정문제인 만큼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수호해 나가야 함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를 만나 후계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북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체제지지에서 권력승계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권력승계과정에서 여론과 국민감정은 무시될 수 없는 요인의 하나이다. 이 같은 범주의 주체에는 청년(특히 학생집단), 지식인, 노동자 및 농민 등의 집단들이 포함된다. 어느 한 개인도 절대권의 장악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지지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라이벌은 현 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불만세력들을 규합하여 도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권력투쟁은 집단갈등의 정치와 얽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론과 국민의 가정이 승계에 결정적인 요인은 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에서 찾을 수 있다.

### 4. 분석틀

북한의 당 대표자회를 통해 보여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권력세습은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후계세습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따른 후계자 선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승계와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체제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체제유지의 귀속요인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당국의 실정이지만, 그 반대로 체제유지의 갈등 및 협력요인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귀속요인과 협력요인이 공유하면 더욱 그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 반대로 갈등요인이 귀속요인과 협력요인에 반대적일 때는 위험을 노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데서 이 논문은 귀속요인과 갈등 및 협력 요인이 서로 연계된 만큼 동시에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체제유지의 귀속요인이 강할수록 갈등요인은 감소하겠지만 이 또한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요인들 간 변수가 다를 수도 있다.

### Ⅲ. 북한의 권력승계과정

여기에서는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을 김일성-김정일로의 과정과 김정일-김정은으로의 후계 구축을 비교하면서 승계과정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는 3대 권력세습의 공식화, 당·군 장악과 후계구축 작업, 가족 권력체계 구축, 대남·대외 정책의 유연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3대 권력세습의 공식화

북한의 권력승계는 대를 잇는다는 것과 수령인 최고권력자에의 충실성, 그리고 당·군 내부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을 후계요건으로 한다는 데서 큰 의미를 지닌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밑천은 부모의 후광이라는 점인데,<sup>7)</sup> 김정은 또한 김정일의 후광으로 권력승계를 이어가게 됐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대 후반(1982년생 추정)에 불과한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와 당 중앙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북한식의 ‘3대 권력세습’ 구도를 공식화했다. 44년 만에 소집된 노동당 대표자회에 맞춰 자신의 뒤를 이룰 후계자가 김정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이로써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지 1년 9개월 만에, 고 김일성 주석이 아들 김정일 위원장한테 넘겨줬던 세습권력을 손자 김정은이 다시 이어받는 초유의 권력승계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24세였던 1964년 4월 노동당의 말단 지도원 신분으로 ‘후계수업’을 시작해 9년 후인 1973년 당의 조직·선전 담당 비서에 올랐고, 그 이듬해인 1974년 제5기 8차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현 정치국)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됐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이때까지만 해도 ‘후계자 김정일’은 북한 내부에서만 인정된 사실이고, 고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임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군사위원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다. 당 지도원으로 공무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16년 만에, 40대를 바라보는 38세의 나이로 북한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은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바로 후계자로 등극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 위원장의 후계구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대장’ 칭호와 당 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3대 권력세습을 위한 공식적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셋별장군’ ‘청년대장’에서 이제 인민군 대장으로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하게 된 것이다. 후계자 김정은에게 첫 공식 직함으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도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하에서도 김 위원장이

7) 북한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주신,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김정일,” 정주신 편, 『현대 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138-140쪽 참조.

최대 국정지표로 삼았던 ‘선군정치’의 기치는 퇴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군 경협이 전무하고 군부 인맥도 일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친 군부’ 이미지를 포장함으로써 군 내부로부터의 지지를 한층 공고히 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진작부터 김정은에게 ‘셋별장군’ ‘청년대장’ ‘김대장’ 같은 별호를 써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 2. 당·군 장악과 후계구축 작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북한의 후계 구축 작업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공직에 등장해 후계자로 선포되기까지 16년이 걸린 일을 김정은은 불과 3~4년 만에 이루려는 모양새다.<sup>8)</sup> 김정은은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하루 뒤인 28일 열린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되어 결국 2인자 굳히기에 들어갔다. 공직에 처음 등장해 후계자 내정까지 단 이틀이 걸린 셈이다. 이는 1964년 당 조직지도원(당시 22세)으로 공직에 진출한 김 위원장이 1974년에야 당 중앙위 정치위원에 선출된 것과 비교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을 만들어 선출한 것은 단계적 권력승계의 과정이며, 김정일이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고 자신은 원수가 됐듯이 향후 김정은은 김정일을 상징적 자리로 추대하면서 자신이 군사위원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 절차와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정은은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출하면서 공식 후계자가 될 전망이다.

###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 구축 과정 비교

김정일		김정은
1964년 당 조직지도원(22세)	공직 진출	2010년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 수여(약27세)
1974년 당 중앙위 정치위원(32세)	후계자 내정	9월 28일 당 중앙위 정치위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38세)	후계자로 공식 등장	2012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예상
아버지가 20년간 든든히 지원	안정적 후계구도 전망	아버지 사후에 고모·고모부 등이 후견 예상

「국민일보」, 2010. 9. 29.

8) 「국민일보」, 2010. 9. 29.

### 3. '新군부' 부상과 후견그룹 등장

44년 만에 열린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세습이 공론화됨은 물론,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격적인 등장을 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27세(1969년) 때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등용됐고, 31세(1973) 때 당 조직비서 겸 선전비서로 기용됐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과 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으로 군 장악 토대를 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상설 조직으로 보기 어렵지만, 김정은이 조직지도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북한은 김정은 후계구도의 안착을 위해 친족 등을 위주로 '후견인 체제'를 갖췄다. 유례가 없는 3대세습을 위한 족벌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은 여동생 김경희와 그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측근인 이영호 총참모장 등 김정은의 친위대를 당과 군의 요직에 동반 승진시켰다. 또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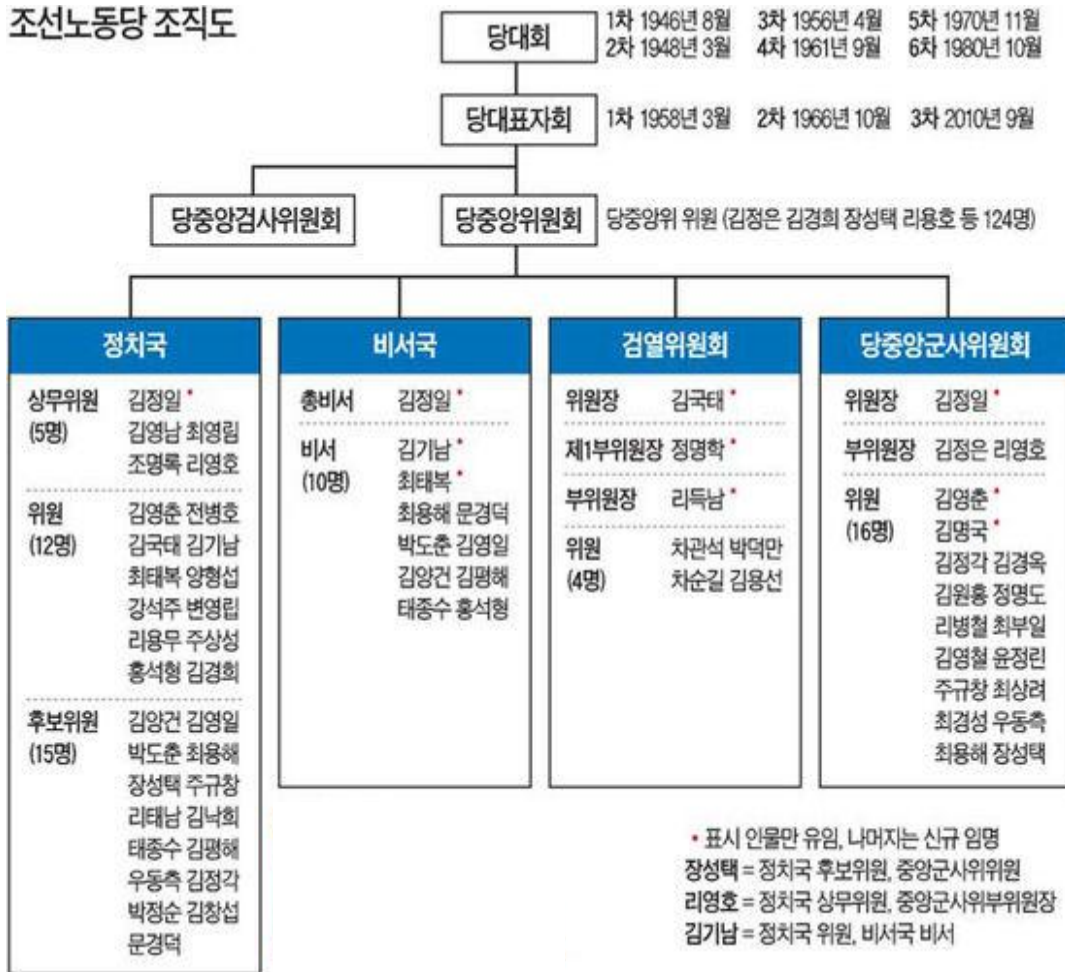
둘째, 50~60대 신군부의 대표주자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차수로 진급하면서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김영춘을 밀어내고 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평양방어사령관을 거쳐 2009년에 김격식 4군단장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올랐던 리영호는 북한에서 최고의 포병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는 군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이 군사 작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셋째, 리영호 군 총참모장이 김정은과 함께 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최룡해,<sup>9)</sup> 김경욱<sup>10)</sup> 등이 대장 칭호를 받은 것은 군 권력의 축이 재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룡해와 김경욱 등은 '대장' 칭호와 함께 군사위 위원으로 임명돼 김정은 후계구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국방위원회 원로들인 김영춘(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과 오극렬 등이 뒤로 밀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진 것이다. 결국은 김정은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신(新)군부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에서 16명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기존 멤버였던 리을설, 리하일, 조명록 등 4명은 해임되고 김영춘, 김명국 2명만 자리를 보존했다. 이 후견그룹의 등장은 김정일 체제의 지지 기반인 원로그룹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9) 김정일이 최룡해를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앉힌 것은 대(代)를 이어 김일성 가문에 충성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최룡해의 아버지 최현(1982년 사망)은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벌였던 '빨치산 1세대'이자 김일성의 최측근이다. 최현은 김정은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빨치산 1세대들을 규합해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10)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김경욱은 군사지도부문 담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군부장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조선노동당 조직도



「한국경제신문」, 2010. 9. 29.

#### 4. 당 규약의 개정과 선군정치 강행

북한이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규약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삭제하는 등 당규 일부를 개정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것은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이다. 2010년 9월 29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조선노동당의 개정 당규약 서문에 따르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 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바뀌었다.<sup>11)</sup>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대목이 빠지고 '인민 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갔다.

11) 「서울연합뉴스」, 2010. 9. 29.

이번 개정 서문은 조선노동당을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한 노동계급과 근로 인민 대중의 핵심부대이자 전위부대”라고 새롭게 규정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선군정치’라는 용어도 새로 들어갔다. 또한 북한은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수정했다.

당 규약에는 중앙군사위가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결정하고,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군정치’ 바람에 편승한 국방위에 밀려 많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원래는 당 중앙군사위가 매우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김정은 부위원장의 후계체제를 제1선에서 끌고 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경우, 중앙군사위는 당 규약 내용 이상으로 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에 힘입어 완력이 세질대로 세진 상태다. 여하튼 ‘미래의 권력’인 후계자 김정은이 중앙군사위를 토대로 군 장악에 나설 경우, 이 조직의 힘이 더 강해질 개연성은 높다고 봐야 한다.

## 6. 대남·대외정책의 현상유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됨에 따라 향후 대남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인민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개방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분간 큰 틀의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를테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새로운 정치노선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향후 2~3년간은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북한 내부문제 등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김정은의 독자적 통치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까지는 ‘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그 때까지 김정은이 군과 당 내에 지지세력들을 규합해 권력기반이 완성되면 2012년 이후에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대남, 대내 유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권력기반이 구축되지 않았고, 김정일의 권력 기반인 원로그룹들도 견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변화를 모색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다.

## IV. 권력승계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와 후계구도는 한반도 문제의 향배가 달

린 각별한 사안이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유인하게 되었지만,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물 밑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3대 세습으로 가는 길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김정은 스스로의 능력 입증, 권력 엘리트 및 주민의 지지, 경제난 극복 등 변수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sup>12)</sup>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의 공식화는 권력승계 과정의 일환일 뿐 당장 그것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당장 후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으로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북한이 당분간 내치에 치중해야 하는 만큼 남북관계 및 6자 회담에 대한 극적인 입장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문제에 치중해야 하는 만큼 후퇴할 것이지만, 장차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 해결은 개혁·개방이 유일한 탈출구인 만큼, 후계체제 정비 기간을 거친 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이번에 북한이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 하나를 치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기본 단위를 나라와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관계를 풀 때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최종 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한 것이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때 개정된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모두 삭제한 데 이어 당 규약에서도 이를 삭제한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실현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당 규약에 명시된 '전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 때문에 남북화해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

셋째, 김일성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핵문제를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로까지 물려준다면 김정은 정권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 자원이 고갈된 북한으로서는 대외 관계 확장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에 의존하면서 근근이 버텨내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외에 핵문제가 북한과 주변국가 간에 긴장과 대치국면을 초래한다는 데서 많은 우려를 주고 있다. 물론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지만 이 핵문제가 권력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문제를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체제로 계승한다면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공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넷째,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건강이나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김정은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린 데다,

12) 「국민일보」, 2010. 09. 29.

〈동북아연구〉

지도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고, 더욱이 심각한 경제난까지 겹친 북한 상황이어서 권력 장악 과정에서 내부 권력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더라도 철저한 세뇌교육과 변화를 원치 않는 북한 고위층 때문에 권력승계 이후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게 대장으로 칭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여동생 김경희와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등 6명에게도 인민군 대장의 군사 칭호를 수여한 만큼 이들로부터 탄탄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의 후견인 그룹을 군 고위직에 포진시켜 후계 체제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그의 동생인 김경희와 그의 남편 장성택의 역할, 북한 엘리트집단 내부의 파위게임 등에 따라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후계 공식화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승계가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은의 정치적 역량이 입증되지 못한 데다 김정일 사후 후견인 장성택이 김정은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등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급변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김정은 공동 정권 체제에서 권력의 급격한 이동, 권력 투쟁 등에 따른 무리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문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김정은 후계구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후계 안정화를 위해서도 대외, 대남 관계에서 기존보다 더욱 유연해질 것이다. 북한은 권력승계과정에서 내부 안정이 필요한 만큼 대외 및 대남관계에서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키기보다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다. 유연성에 무게를 둔 전망은 북한 스스로 김정은으로의 후계 안정화를 위해 대외, 대남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갈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북한이 화폐개혁 실패 등에 따른 경제난 가중도 '부드러운 북한'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북측은 후계구도 구축과정에서 스스로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대외 및 대남관계에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측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대남 관계에서도 수해지원 요청, 이산가족상봉 제의 등 잇따른 유화조치를 내놓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외, 대남전략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여섯째,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었으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정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후계구도가 남북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남북관계 향배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접근법과 북핵 문제 해

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대북조치를 유지하는 한 현재의 파국적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되돌리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유화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북측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압박을 받는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김정은 후계체제로 말미암아 북한 노동당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석주 내각부총리를 비롯해 대남(對南) 라인들이 당 요직에 대거 진출한 데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강 부총리가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데 이어 당내 최고 지도기관인 '정치국' 위원(12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23일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는 오랫동안 외무성 제1부상(수석 차관급)으로 일하며 대남 및 대미, 6자회담을 총괄해 온 인물이다. 북한의 대외 선전전략을 담당해 온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강 부총리와 나란히 정치국 위원에 낙점됐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당 중앙위 위원으로 선임된 데 이어 정치국 후보위원(15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에서 대남·대외 정책을 지휘하는 3인방이 나란히 '영전'한 셈이다.<sup>13)</sup> 그러나 후계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북한은 나름대로 후계자의 치적이 필요한 만큼 대남라인 정비 등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에 나름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김정은 후계체제 이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같은 내용들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행할 의지를 정부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해놓은 결실을 이명박 정부가 정책으로 승계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보수나 진보의 시각차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화해에 초점을 둔 데서<sup>14)</sup>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못 할 리는 없다. 때가 되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순리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이명박-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문제나 남북관계 해소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 의지가 중요하며, 현하 남북 간에 꼬인 천안문 사건이나 북한의 대남도발 등 여러 난제를 풀어가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아홉째,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주문하고 있지만, 권력승계를 시작한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이 심

13) 「한국경제신문」, 2010. 9. 29.

14) 이에 대해서는 정주신, "한국 제16대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비교,"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43집, (2007) 참조 바람.

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북한 정권은 그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은 현재 자국의 내정, 외교가 정확하고 역사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개혁·개방 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어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구도 체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대외 정책의 큰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후계 체제를 정비하는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는 개혁·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열 번째,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논의 등은 상당기간 현 상태에 묶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희망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6자회담의 진전도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근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한반도 비핵화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북한은 이미 영원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현존 체제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무모한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지는 돌발변수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V. 결 론

이 논문은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권력세습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전망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권력승계요인을 귀속요인과 갈등 및 협력요인 등이 북한 체제유지에 동시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분석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체제 속성상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승계가 부자승계 원칙으로 3대에 걸쳐 추진되었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후계구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같다. 군의 속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유약한 20대 후반의 아들을 권력의 후계자로 내몬 것은 최고권력자의 의도이겠으나, 이로 인해 권력승계 이후 북한의 내부사정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권력승계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후계체제를 옹립하여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지켜내는 데 있을 것이다. 설사 김정일이 건강악화로 사망에 이를지라도 가족 권력체제를 확립하여 가족 측근세력들이 도와주어 승계에 안정을 꾀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당·군의 절대적 지지기반도 권력장악의 요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실체가 살아있고 죽은 것은 다를 수 있어 김정일 이후 권력과정에서 측근세력이나 군부세력이 어떤 움직

임을 보여줄 것인 가가 최대의 관심사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다음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 및 권력승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다. 권력의 실체인 김정일의 존재와 그 아들인 김정은의 후계세습의 구도는 분명 북한의 체제유지를 강화할 목적이요 안정적인 권력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적어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의 하이 라이트인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은 남북대화를 매개로 풀어나가려는 북한의 속성으로 볼 때, 금강산관광 등 기존의 남북관계는 진척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여하튼 북한이 권력승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은 무엇인가 불안한 느낌을 준다.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은 물론 정치에 갓 데뷔한 아들을 권력의 최정상으로 격상시킨 것은 김정일의 병세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권력상속 의도는 그간 김일성-김정일의 북한 통치를 보장받고 안정된 체제유지를 이끌고자하는 속셈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놓여져 있는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 아니고서는 북한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이 온존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김정일 이후 김정은 후계자의 순탄한 체제유지를 위한다면 평화적인 남북관계 및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이우정, 『권력승계와 정당성』 (신양사, 1997).
- 이우정, “북한체제 엘리트의 이동양태 및 갈등분석” 「안보연구」 (동국대 안보연구소, 1981).
- 정주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주신 편, 『현대 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 정주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김정일,” 정주신 편, 『현대 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 정주신, “한국 제16대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비교,”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43집, (2007).
- 정주신 편, 『현대 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 Lasswell, Harold D. (eds.), *World Revolutionary Elites*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65).
- Thbertson, Gilbert M. Cu, *Political Myth and Epic* (Michigan State Univ. Press, 1975).
- 「국민일보」, 2010. 09. 29.
- 「한국경제신문」, 2010. 9. 29.
- 「서울연합뉴스」, 2010. 9. 29.

<동북아연구>

《Abstract》

##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and Prospecti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ung Joo-Shin · Kim Hag-Man

This study analyses the succession of power to Kim Jeong-eun as the power of Kim Il-sung was passed to his son Kim Jeong-il. To analyse the power success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focuses on father-to-son succession of power for three generations.

In conclusion, it feels unstable for North Korea to have a fast power transfer. The transmission of power to a son making his first debut to the political world implies Kim Jeong-il has a fatal condition or disease. Such intention to transmit power to his son is interpreted as a means to maintain a stable political system and firm control.

Key Words : North Korea, transmission of power, father-to-son succession of power, Kim Jeong-il-Kim Jeong-eun, maintenance of system,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투고일 : 2010. 6. 30 / 심사일 : 2010. 7. 10 / 심사완료일 : 2010. 8. 25